

1980년대 중후반 냉전 질서의 변화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행방

이상록*

국문요약

1980년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주의 정치사상으로만 이해되었지만, 냉전 질서의 변화와 맞물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내고 있었고 급진적인 사상과 접합되기도 했다. 이 논문은 냉전의 지각변동·해체와 남북관계의 변화가 요동치던 1980년대 중후반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담론적 기능을 수행했는가 하는 문제를 분절되면서도 연관되어 있는 세 가지 주체의 흐름으로 다루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지배이데올로그들은 민주주의의 실질화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반면, 급진적 저항운동의 공세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방어의 수단으로 삼았다. 일부 지배이데올로그는 기존의 반공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자본주의적 주체 만들기에 몰두하기도 했다. 김대중은 ‘비폭력 민주주의, 비용공 남북통일, 비반미 민족자주’를 내세울 만큼 자칭 ‘온건개혁주의자’였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였다. 그는 분배정의 실현 등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고, 냉전·분단이 유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파행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 대안적 자유민주주의자였다고 볼 수 있다.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문익환은 1980년대 급진적 좌파운동의 흐름이 저항적 자유민주주의에 끼친 강력한 영향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의 탈냉전적이고 탈식민주의적 태도는 시대의 고난을 받는 존재로서의 민중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불균등한 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자유민주주의,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문익환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rokhistory@gmail.com

I. 머리말

노르베르토 보비오(Norberto Bobbio 1992, 48)의 지적처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다. 자유주의적 이상과 민주주의적 절차는 개인이라는 주체를 매개로 하여 연결되어 왔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컨텍스트와 양자의 관계설정 에 따라 ‘천개의 얼굴’로 역사 속에서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주의의 계보에 놓인 정치사상으로 이해되지만,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선 라클라우와 무페(Ernesto Laclau & Chantal Mouffe 2012, 302-303)가 자유민주주의를 폐기의 대상이 아닌 재전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확인되듯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로 조합되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는 진보적 급진사상의 계보에 놓일 수도 있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자유주의 담론이 보수주의 담론의 요소들과 접합될 수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계기를 강조하는 형태의 다양한 접합과 재정의가 가능하다는 자유주의 담론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비결정성을 활용하여 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1980년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주의 정치사상으로만 이해되었지만, 냉전 질서의 변화와 맞물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내고 있었고 급진적인 사상과 접합되기도 했다.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자유민주주의는 냉전과 분단을 배경으로 보수적 성격을 지녀왔다. 강정인(2002, 49-54)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그 자체보다는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온 권위주의 정권의 속성으로 인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보수화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한국현대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정권의 자기정당화 담론으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저항운동 진영에서의 유력한 사상적 원천이기도 했다.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지배의 헤게모니와 저항의 헤게모니를 동시에 행사하는 기본적 이데올로기이자 담론이었다. 1950~60년대 한국 지성계를 이끌었던 『사상계』는 통치자들의 교과서이면서 동시에 저항지식의 보급처였다(이상록 2020). 박정희가 유신개헌을 선포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자유민주주의를 유보시킨 것이 예외적이었지만, 박정희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냉전 지형 속에서 자유민

주주의의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1980년대는 사상사적 맥락에서 진정한 예외의 시간대였다. 냉전지형 속에서 남한의 저항운동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던지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등으로 사상적 무장을 시도했고, 사회주의 이론에 따라 저항운동을 조직했다는 점에서 분명 1980년대 자유민주주의는 그 이전과 다른 양상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남희(2015, 189-195)가 지적했듯이 해방이후 한국 지식인들은 1970년대 말까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에 매혹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모순적인 대한정책과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실망 등으로 인해 미국에 대해 깊은 애증을 갖고 있었다. 신군부의 광주 유혈진압과 전두환 정권에 대해 미국이 지지했다는 광범위한 믿음은 1980년대 학생과 지식인들이 반미주의를 내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거리두기를 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했다.

냉전의 지각변동·해체와 남북관계의 변화가 요동치던 1980년대 중후반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담론적 기능을 수행했을까. 마르크스-레닌주의 등의 영향으로 저항담론이 급진화된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태도의 차이를 드러냈을까. 이 연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세 가지 스펙트럼의 자유민주주의(신군부 정권과 지배이데올로기, 김대중, 문익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주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있다. 이나미(송병현·이나미·김면희 2004, 133-136)는 전두환 정권의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으로 박정희 정권의 자유민주주의관을 계승한 점, 정치적 차원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강조한 점, 기업활동의 자유화를 포함하여 경제정책 면에서 자유화를 추구한 점 등을 들었다. 전재호(2016, 277)는 한국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김대중이 행한 역할을 분석하면서 김대중이 민주화를 위해서는 참여세력의 연합을 중시하여 중산층 및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급진성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철(2019, 218-232)은 김대중이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자였지만,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 시장의 민주화를 추구하기도 했음을 지적했다. 김학재(2017, 74)는 1980년대에 김대중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연방제 통일방안을 구상했고, 이는 느슨한 상징적 연방기

구 하에 평화 공존과 교류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문익환에 대해 연구해온 이유나(2007, 175-177)는 문익환의 통일사상 형성에 윤동주, 안병무, 김재준, 장준하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했고, 이유나(2020, 193-198)는 문익환이 생명 평화, 민주 평화, 통일 평화를 지향한 평화주의자였다면서 그의 신학적 이해로부터 나온 평화사상이 통일론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필자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성과 위에서 1980년대 자유민주주의의 분화와 특징을 좀 더 복합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김대중과 문익환의 경우 3.1민주구국선언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개헌운동과 87년 대통령선거 등으로 긴밀히 연결되는 관계이기에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색해보일 수도 있겠으나, 중첩되면서도 차이를 드러내는 두 사람의 자유민주주의 경로를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이 시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의도적으로 구분하였다.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는 담론의 복합적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하면서 1980년대 자유민주주의의 행방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체제방어적 자유민주주의론: 신군부 정권과 지배이데올로기

1. 통일론과 자유민주주의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소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남북한 기본관계잠정협정’의 체결을 제안했다. 전두환 정권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① 남북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② 이 회의에서 ‘통일민주공화국’의 기본이 될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③ 이 ‘통일헌법초안’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확정하고, ④ 이 확정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 ‘통일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는 통일안이였다(국토통일원 1982, 146). 국토통일원은 이 방안을 “평화적이며 민주적 원리에 의거”한 것이라고 평가

했다. 이때의 ‘민주적 원리’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경제발전으로 인해 북한에 비해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임했다. 198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두환은 “국토의 반 저쪽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우월한 제도를 “6천만 모든 동포가 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했노라고 했다(경향신문 1982/8/16).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전두환 정권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자유 총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자신감은 전두환 정권의 외교정책에도 반영되었다. 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 등을 주장한 6.23 선언 이후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1980년대 남북한의 수교 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상황으로 인해 전두환 정권은 공산권에 대한 비정치교류 확대 정책을 강화했다. 1984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두환은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과도 계속적인 개방과 교류의 증진을 통하여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기반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고, ‘중공’과의 교류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84/10/4). 대(對)공산권 교류와 관련해 1987년까지는 주로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에서 성과를 보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공산권과의 교류 이슈는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은 남한과 소련, 중국과의 관계 개선 추구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의 우방과 관계 개선하는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냉전의 진영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노태우 정권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1988년 10월 4일 노태우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응한다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겠다고 말했고, “민족통일의 방안은 편협한 냉전논리나 어느 일방에 선 주장에서 벗어나 그것을 남북 양측이 받아들여 실현해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북한측의 통일방안도 통일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88/10/4). 10월 18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노태우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산인 한반도에서의 대결구조 종식에 세계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조선일보 1988/10/19).

1989년 9월 11일 노태우는 국회 본회의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이 통일방안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응하는 것으로, 단일 국가로 통일되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 남북연합 체제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전두환 정권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사실상의 흡수통일 또는 패권적 통일방안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취약했던 점을 감안하여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동등성을 기초로 남북연합을 구성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조선일보 1989/9/12). 하지만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총선거를 통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점 등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사실상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웠다. 새 통일방안에 대해 야당인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질적 내용이 없다거나, 형식논리보다는 통일의지와 실질적 뒷받침을 위한 제도 개편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한겨레신문 1989/9/12). 9월 14일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일제도에 기초한 남북한 통일은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일방이 타방을 먹지 않는 한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다(동아일보 1989/9/15).

2. 삼민투위(三民鬪委)의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체제 수호적 비판

1985년 5월 23일 서울 시내 5개 대학 75명의 대학생이 미문화원을 점거하여 “미국은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개 사과하라”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 사건의 배후로 전학련과 삼민투위를 지목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1985년 6월 1일 국회본회의에서 민주정의당 김중권 의원은 폭력시위를 감행하는 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뒤흔들어도 그들이 학생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신분 때문에 구속을 쉽게 해제당하거나 가볍고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국회사무처 1985, 6). 뒤이어 단상에 오른 신민당 이철 의원은 “민중해방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본 의원에게 맡겨진 몫을 다할 것이며 우리 민중의 염원을 꺾어 누르는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적인 모든 죄악들을 척결하는 일에 있어서 주어진 사명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국회사무처 1985, 9). 그는 미문화원 농성 사건의 책임은 전두환 정권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긴 시간을 할애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며 질의했다. 국무총리 노신영은 이철 의원 발언 중 ‘어차피 우리는 북한의 이념, 체제와, 즉 평등의 개념을 단순히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지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과 ‘정부가 개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혁명으로 가는…’ 이 두 발언을 환기시키며 이러한 발언이 국회에서 면책특권 하에서 이루어져도 되느냐고 반문했다(국회사무처 1985, 18).

민정당 현경대 의원은 삼민주주의의 활동 목표는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 노선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삼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이철 의원의 발언을 두고 “삼민주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발언”이었다면서 국회에서 민중 봉기를 선동하고 폭력혁명을 유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발언을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국회사무처 1985, 29). 이철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정당은 6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인지 검토했는데, 징계를 고려하지 않는 대신 신민당에 공개해명을 촉구하는 성명과 공개질문서를 채택했다. 민정당은 성명에서 “신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인지 폭력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정당인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경향신문 1985/6/4). 언론에서도 “위협천만의 민중해방론”을 추종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이처럼 ‘위험한 사상’이 국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듯한 현실에 대해 “경악과 불안감”을 표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민중해방론을 옹호하는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경향신문 1985/6/3).

학생운동의 급진화와 맞물려 전두환 정권에 친화적인 지배이데올로기들은 ‘민중민주주의’에 대해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했다.

공산주의 이론 비판 연구를 했던 윤원구 교수는 “삼민투위는 과연 용공 단체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삼민투위의 노선인 ‘민중민주주의’를 검토해보겠다며 삼민투위의 『일보전진』을 분석했다. 그는 삼민투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그들의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변종이라고 보았다. 그는 삼민투위가 민중에 의한 정권 장악을 위해 ‘민주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이들은 혁명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에 대한 자유의 제한은 파쇼나 탄압이 아니라 “자유 수호의 투쟁”이라며, 전두환 정권의 학생운동 탄압을 정당화했다(윤원구 1985, 58-67).

북한연구소 김창순 이사장도 민중민주주의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를 오로지 압박과 피압박,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 갈등 대립관계로만 부각시킴으로써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민중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마르크스주의 계보의 좌익혁명사상이라고 단정지었다(김창순 1985, 87). 정치학자 정천구 교수는 ‘민중론자’들의 ‘좌경 이데올로기’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외부 세력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국가 단체들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방어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좌익사상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부조리라고 지적하면서 경제구조의 거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들을 과감히 해결해 나갈 개혁 조치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옹호하고, “좌익 폭력 이데올로기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킨다”는 것을 여야의 공동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정천구 1985, 73).

1986년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전두환이 “급진좌경화한 일부 의식분자들이 반국가적 불순세력과 직접 간접의 연계 아래 폭력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책동마저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발언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세력을 ‘반국가적 불순세력과 연계된 활동으로 놓고 탄압·처벌할 수 있게 하는 담론이었다(경향신문 1986/10/21). 이처럼 통치자들과 지배이데올로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와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성의 원천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었다.

3. 자유민주주의를 포지티브하게 정정하기

1986년 3월 임시국회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위원이 행한 연설은 폭력적 수단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응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방어적 자유민주주의론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쟁체제의 우위를 확신, 조국의 장래에 대한 낙관을 갖도록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라는 노태우의 메시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당시 민정당 등 지배블럭은 인식하고 있었다(노태우 1986, 14-16).

민주정의당은 당내에 국책연구소를 두고 자신들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1984년부터 민주정의당 국책연구소는 『국책연구』라는 계간지를 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포지티브하게 정정하려는 지식인들의 제언들이 수록되곤 했다. 민정당 국책연구소 이념연구실장을 맡고 있던 김형효는 칸트의 인간학, 마태복음 속의 인간 소유욕구에 대한 분석 등에 기대어 마르크스의 인간 이해와 레닌의 일당독재론을 비판하였다. 그는 『민주자본주의의 정신』을 집필한 마이클 노박(M. Novak)의 주장을 빌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자본주의의 정신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달리 결과적 불평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시인하고, 인간의 자유추구를 긍정하면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만민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국가가 관리하고 복지사회를 향한 국가통제를 통해 불평등을 완충하도록 하는 사상이라고 설명했다(김형효 1986, 171). 민주자본주의의 철학은 소유욕을 포함한 인간의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했다.

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박석균은 1980년대 학생들이 좌익사상에 빠지는 원인으로 ‘인간소외, 빈부격차, 소비의 전시효과, 해방신화와 종속이론 등의 신사조, 민족주의에의 각성, 반정부 감정의 누적, 물리적 힘 앞에서의 좌절,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이데올로기 논쟁의 역제’ 등을 지목했다. 많은

지배이데올로그들이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좌경학생’들을 법치주의에 입각해 단호히 처벌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석균은 그들과 대결하고 전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을 포용하면서 “자유와 민주와 번영을 창조해 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박석균 1986, 256-258). 그는 부정의 가치를 가르치는 반공이념 교육을 지양하고, 사랑·이해·협동·휴머니즘·존경·우애와 같은 긍정의 가치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했다. 박석균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인식 해소를 위해 분배정책을 재조정하고 부유층의 소비 자숙을 유도하며, 소득의 균형분배, 독과점의 방지, 불로소득 제한 등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준독점상태에 있는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 환경을 개선하여 누구든 매스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반대론자들에게도 참여권을 부여하여 ‘폭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생각은 중도성향의 리버럴 지식인들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었다. 사회학자 송복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개인의 해방’으로부터 ‘반대의 자유’로 이행”한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자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스스로 엘리트를 선거하는데 있다면서 좋은 엘리트를 배출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자유주의적 토양과 사회구조의 개선이 엘리트주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학자 진덕규 교수는 경제개발의 효과로 1980년대 한국의 사회조직이 분화되고 이데올로기가 급속히 다원화되는 속도가 가파르는데 반해 정치체제는 그러한 다원성과 경쟁을 수용할 수 없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복은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정치구조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민중민주주의도 사회분화와 발전적 측면으로 보아 정당을 만들어 제도적 장치 안에서 타협해가야 할 것”이라고 민중민주주의도 제도정치의 틀 안으로 포용해야 함을 주장했다(송복·진덕규 1986, 134-144).

Ⅲ. 자유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기:

김대중의 사례를 중심으로

1.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과 경제민주화

1987년에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는 유신체제와 전두환정권을 ‘관료권위주의체제’로 규정하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것을 유신체제 하에서 추진된 고도산업화와 성장일변도 정책이 빚어낸 경제적 배분과 정치참여의 위기에 대한 사후적 대응으로 분석했다. 그는 1970~80년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고도의 사회동원, 개인주의화, 시장기능의 전면적 확산, 전통적 권위구조로의 붕괴 등을 낳았고 이로 인해 과도적 지도자들이나 지배질서가 과거와 같이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감소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사회의 하위체계를 형성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중산층과 민중은 이 시기 크게 성장하여 자율성을 요구하면서 권위주의적 통제에 날카롭게 반발하게 되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민주화’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하나는 제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세력 간의 합의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 즉 민중들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제도적 민주화’였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가 창출한 노동계급 등 사회의 하위집단이 자발적 동의에 의해 불평등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물질적 삶의 조건이 보장될 수 있는 과정과 제도를 마련하는 ‘실질적 민주화’였다. 이런 점에서 최장집은 ‘민주화’를 정치참여의 스펙트럼이 확장되는 것, 제도권 밖에 존재했던 정치적 주체들이 정당정치 내에서 배분적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사회경제적 권리 확대가 민주화의 두 번째 단계라고 그는 주장했다. 6월민주항쟁 직전에 쓴 최장집의 이러한 ‘민주화’ 해석에 비춰보면, 1987년 6월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제도적 민주화’는 일정한 성과를 이뤄냈으나, ‘실질적 민주화’는 부분적인 성공 내지 사실상의 실패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경제민주화’ 이슈가 크게 떠올랐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생산의 효율성과 능률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온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노사갈등을 비롯한 사회갈등이 증대되었다는데 대한

사회적 공감이가 크게 일었다. 이 국면에서는 전경련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 “이젠 경제민주화 차례”라며 경제민주화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을 정도 였다. 당시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한 동아일보의 사설은 이 문제를 ‘농률과 사회정의의 최적 결합’으로 설명했다(동아일보 1987/7/25). 문제는 이 결합 을 어떻게 제도화 하느냐와 사회정의를 어떤 가치로 구현하느냐 하는데 있 었다. 전경련 등은 ‘경제민주화’를 정부규제완화와 자율성 제고, 자유기업주 의 옹호 등으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맥락과 다르게 전유하고 있었다(매일 경제신문 1987/12/24). 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정부가 공정경 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많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동 의하고 있었다.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는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해 ‘정의로운 자유경제’ 를 주장했다. 그는 성장·안정·분배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왜곡된 분배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은 “기업인은 기업인 의 몫을, 노동자는 노동자의 몫을, 농민·어민·봉급생활자·지식인 모두가 자기의 정당한 몫을 차지할 때만 자유경제의 진가가 빛난다”고 말했다(매일 경제신문 1988/7/2). 그는 노동쟁의를 위협시키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불만 을 드러내며, 어용노조 퇴출과 적정임금 보장 등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요 구는 지극히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 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중에서도 정당한 대표가 나와 협상을 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구매력이 증가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대중 1993b, 268-269). 김대중은 1969년 『신동아』 기고 문에서부터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 법제화와 종업원 지주제 실시를 주장 했으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제한적 범위의 기업통제권을 부여하는 ‘낮은’ 수 준의 산업민주주의 제도였다(김용철 2019, 226-227) 그는 분배정의에 대한 강조 못지않게 ‘자유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의 기업 정 책은 관권경제에서 완전 자유경제로 전환해야 하고 정부의 간섭을 없애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특혜도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김대중 1993b, 277).

2. 자유민주주의와 ‘진정한 안보’의 실현

1986년 11월 29일 개헌추진 범국민서울대회에서 김대중은 “진정한 안보

는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사회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진정한 안보, 평화와 통일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전두환 독재정권’을 하루속히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중 1993d, 107-108).

냉전체제의 이완·해체 과정 속에서 반공주의는 보다 근본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학강사 이재영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모순해소의 매커니즘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전제하면서 한국의 경우 냉전의식과 분단의식의 사회화, 즉 반공이데올로기의 재생산으로 인해 사회구조를 지속적으로 갈등증폭의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갈등해소 매커니즘을 구현하는 대신 자본이해의 의제적 대행자가 되어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을 가중시켰고, 그 억압을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즉, 반공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파괴하고 모순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을 낳아서 정부가 주장하는 ‘좌경세력 형성의 온상’을 만들어 낸 주범이라고 이재영은 지적했다(이재영 1987, 193-194).

김대중은 이를 정부의 사회정책과 연결 지어서 전두환 정권이 반공의 가치에 위배되는 반공주의를 행사해왔음을 역설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도 철거민을 두드려패고, 노점상을 몰아내고, 영세 수공업자들을 읍지에서 떨게 하는 등 기본권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중생존권을 거부하고 소수의 재벌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정책은 “공산주의자를 무더기로 양산하는 양공(養共)정책”이라고 말했고, 전두환을 김일성에 대한 최대의 협력자라고 비난했다. 김대중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두환 정권의 반공 정책은 사실상 공산당을 키우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독을 모델로 삼아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에게 공산당에 반대할 이유와 자유를 부여해야만 반공이 실현된다고 말했다(김대중 1993d, 171).

1988년 10월 26일 제144회 정기국회에서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는 노태우정권이 북방정책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올렸으나 내정 면에서는 이렇다 할 업적이 없다면서 5공청산과 민주화를 위해 매진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중은 평화민주당이 극우독재의 배격과 동시에 과격주의 또한 반대

한다면서 안보를 위한 민주주의의 추진을 역설했다.

우리 당은 안보를 중시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해온 종래의 기본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누차 강조해 온대로 진정한 안보와 반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이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은 완전한 민주체제의 실현 속에서 국민을 위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될 때만 가능합니다. 안보를 중시하면 할수록 정부는 민주주의를 더욱 열성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김대중 1990, 41-42).

김영삼이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음을 자주 밝히는데 비해 김대중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를 통한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강조했고, 공산주의와 과격노선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3. 온건개혁주의와 공화국 연방제 통일방안

김대중은 스스로 온건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1987년 무렵 그는 ‘비폭력 민주주의, 비용공 남북통일, 비반미 민족자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김대중 1993c, 47-49). 그는 민중사관은 프롤레타리아적 계급사관이 아니며, ‘민중’이라는 용어가 좌익 용어도 아니라면서 민중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해석하는 지배적 견해에 반대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자유경제주의자이기 때문에 혁신정당이 지향하는 경제기획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자신은 혁신주의자가 아니라고 단언했다(김대중 1993c, 67).

김대중은 평화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서 평민당을 중산층과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족자본의 핵심을 이루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팔도록 하고, 그 이익을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게 하여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또 증권시장의 육성을 통해 자유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김대중 1993d, 67). 김대중은 대통령후보 시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사회정의’를 강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많은 정

책들은 자유시장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치중되어 있고, 공정과 기회균등을 ‘정의’와 사실상 등치시키기도 했다.

통일정책에서도 김대중은 “공산당한테 이득을 주지 않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방안”을 지향했다. 김대중은 정부의 통일방안과 달리 ‘공화국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하여 북한의 ‘연방제’와 동일한 용공통일론자라는 비난에 시달렸지만, 오히려 그는 북한의 통일방안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김대중은 북한의 ‘고려연방 공화국’ 통일방안은 사실상의 단일국가인 연방을 구성해서 이 연방정부가 중앙정부로서 주요 내정과 외교, 국방까지를 다 관장하는 안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의 남북한 정부는 일종의 지방정부로 변하게 되며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중의 공화국연방제 통일안은 1민족 2체제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 양측 정부가 독립정부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가지며, 양측의 공동대표에 의해 구성된 통일기구로 통일의화와 통일행정기구를 두어서 양측 독립정부가 합의하여 그 권한을 부여한 사항을 논의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김대중 1993a, 168-169).

1989년 10월 11일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김대중은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 서경원 의원 등의 방북사건에 대해 이들의 밀입북에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행동이 정권이 선전하듯이 국가를 뒤흔드는 것이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방북사건을 계기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노태우정권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세계적으로 볼 때 냉전논리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와 정의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경쟁입니다. 소련, 폴란드, 헝가리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그들이 국민에 대한 공산주의의 독재를 강행한 결과가 오늘의 자유도 빵도 없는 실패를 초래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제 서슴없는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김대중 1990, 54).

김대중은 자본주의 진영의 승리로 냉전이 귀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구 사회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노출될 때마다 과감한 수정을 거듭하여 경제적·사회적 정의와 복지를 이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변증법적으로 정·반의 대결을 하다가 이제 자유경제와 복지사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합의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이행을 설명했다. 한국은 서구와 달리 자본주의 초기단계의 잘못된 독점과 수탈의 빈부양극화 구조 속으로 역진해 들어가고 있다며 그는 사회경제적 각종 차별의 완화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경제민주화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냉전시대의 자유민주주의론과는 다른 탈냉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다.

민주주의만이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민주주의만이 첨단기술시대에 있어서 노동자와 기술자와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하게 만듭니다(김대중 1990, 61).

김대중은 1971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대중경제론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업데이트 시켜서 1980년대 버전으로 제창하고 있었다. 그는 ‘대중경제’를 ‘정의 있는 자유경제’라고 설명했고, 국민이 경제의 소유와 경영 및 분배에 참여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등의 논의를 끌어들이며 ‘정보화 시대’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낙관적으로 묘사했다.

IV. 자유민주주의를 민중민주주의로 대체하기:

문익환의 사례

1. 민주·민중·민족의 관계를 긴밀히 하기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의 초안 작성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문익환 목사는 민주주의와 통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다. 문익환은 장준하를 계승한 자유민주주의자의 계보에 서 있었지만,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명백히 거부했다. 『씨울의 소리』 1978년 7·8월호에 기고한 「민주회복과 민족통일」에서 그는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민주화는 ‘냉전 시대의 민주주의관’이라고 비판하며 통일과 민주화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 지어 해석했다. 그는 선민주 후통일론이나 선통일 후민주론

과 같은 시간상의 선후의 문제로 양자를 다루는 방식을 거부하고, 통일과 민주화가 서로를 전제로 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통합적인 관계의 것으로 해석했다(문익환 1999a, 23-24). 1980년 『월간 중앙』에 기고했다가 검열당해 전면 삭제된 글 「다시 풀려나서」에서 그는 “남과 북에 독재의 구실을 제공해 주는 마(魔)의 휴전선이 원망스러웠다”고 했는데, 분단이 남북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독재정권을 양산해냈다는 인식으로부터 통일과 민주화를 하나의 과제로 상정하는 견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문익환 1999a, 28). 문익환은 한민족이 겪는 모든 비극의 원천이 분단이라고 주장했고, “분단의 극복 없이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분단모순을 기본모순으로 상정하는 태도를 취했다(문익환 1999a, 39).

1980년에 문익환은 강만길의 ‘분단시대사학 극복론’을 비판한 양병우 교수의 “통일이나 자유이나 하는 가혹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는 주장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며 강만길을 옹호했다(문익환 1980, 69-70).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통일과 대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통일을 통해 ‘자유 있는 평등’과 ‘평등 있는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통일을 이룩하는 민주주의-그것은 자유 있는 평등과 평등 있는 자유로 민족 분열을 극복하는 민주주의다. 그리고 민족사를 배신하지 않고 이를 완성하는 민주주의다(문익환 1980, 77).

민족을 통일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남한의 이데올로기인 자유와 북한의 이데올로기인 평등이 결합하는 민주주의다. 북한은 자유를 지향하고 남한은 평등을 지향하여 서로 접근하는 것이다(문익환 1999a, 70).

문익환은 단순히 휴전선의 철폐가 통일인 것이 아니라, “5천만 민족이 모두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사회를 이룩하는 일”, 즉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실현이 통일이라고 역설했다. ‘주권’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는 주권재민의 문제를 상당히 급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여 “모든 분야에서 명령과 복종의 주종관계를 추방”하는 것으로서의 주권재민을 주장하였다(문익환 1980, 73).

이는 현실 정치에서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주장이지만, 주권재민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중 관계가 해소된 국민의 주권행사 속에는 자유와 평화가 하나가 되어 담겨 있는 것이다. 주권을 행사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그 자유에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자유의 평등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주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민족을 통일하는 민주주의란 전국민이 아무 차별이 없이 주권을 행사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문익환 1980, 74).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문익환의 민주주의 인식은 다분히 이상주의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의 보장은 불평등을 유발해왔고, 평등의 보장은 자유를 위축시킨 사례들이 많았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조화롭기보다 모순적이거나 갈등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단지 통일이라는 분단극복의 과정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민주주의를 이룩해야하고 이룩할 수 있다는 당위에 그의 압도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문익환이 민중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적극 소환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무렵부터로 보인다. 1983년 EYC 부활절 예배 설교인 「부활 이전을 산다」와 4.19기념 강연 「민중의 부활, 민족의 부활」에서 문익환은 예수의 부활을 민중의 부활로 해석했고, “민주화는 민중의 부활이요, 민족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문익환 1999a, 86, 91). 그는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불가분의 관계로 상정하면서 민주주의를 “분단을 거부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일”로 표현하기도 했고, 민족통일을 “민중의 주권 탈환”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문익환 1999a, 99). 이 점에서 그의 민중민주주의론은 ‘민중 주도의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 민족주의’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문익환의 민중민주주의론은 광의의 자유민주주의론 내부에 있었다.

민주주의가 이같이 민중민주주의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유라는 말이 민주주의의 관형사로서 제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중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만인이 자유하는 주권자가 될 때, 이 민족은 자주하는 민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주하는 국민이 세운 정부만이 외세의 온갖 압력을 뿌리치고 자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지켜주는, 자주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

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도 있습니다(문익환 1999b, 353-354).

그는 이처럼 민중민주주의가 역설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완성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1987년 6월민주항쟁 직후에 문익환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다기보다는 참다운 자유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라는 얘기”라고 밝힌 것에서도 확인된다(문익환 1999a, 221). 지배이데올로기들은 민중민주주의론을 사회주의에서의 인민민주주의와 사실상 동일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문익환은 자신이 말하는 민중의 주권 탈환으로서의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유를 민중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민주주의와 통일의 실현의 기본조건이라는 점에서 강조했다. 그런데 문익환의 주장에서 중요한 점은 탈냉전·탈이데올로기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분단을 구실삼아 독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과 북이 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으며, 통일일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분열을 지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요. 남쪽의 우(右)와 북쪽의 좌(左)를 끌어당겨서 제3의 길을 찾아야 해요. 그것이 곧 민족을 통일하는 민주주의의 길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 일을 담당할 제3세력이 자라지 못했어요. 회색분자·기회주의자라고 지탄받을 수도 있는 이 길, 이남에서는 ‘빨갱이’라고 몰릴 수도 있는 이 가시밭길을 누가 갈 것인가? 저는 이것을 교회에 떠 맡겨진 민족 대화해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문익환 1999a, 100-101).

그는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인 평등과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인 자유가 통합된 민주주의만이 민족을 통일하는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과 북의 변증법적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의 민족 대화해가 곧 평화 정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익환의 주장은 일견 맹목적 통일지상주의처럼 보이기도 하나, 평화에 대한 그의 주장은 그의 신학적 이해와 맞물려 있고 동시에 그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화하는데 대한 저항으로서의 탈식민주의와 맞닿아있기도 하다.

이렇게 정의가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에 이르지 않는 정의는 미완성 교

항악이지요. 정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직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평화에 이르는 몸부림이에요. 정의의 싸움은 평화를 지키려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려는 싸움이 아닐 때,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닌 악이 되는 거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것을 일찍이 알았던 것 같아요. 평화의 평(平)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 아십니까? 지배자·피지배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명령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 가두는 사람과 갇힌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문익환 1999a, 118-119).

문익환은 예수의 평화를 전쟁에 대립하는 평화라고 규정하고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지는 않았다. 정의를 위한 싸움, 지배자의 명령에 맞서는 싸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 등이 모두 평화를 위한 적극적 행위로 긍정되었다. 그는 한반도의 분단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종의 ‘화약고’ 상태라고 설명했고, 평화 지향적 민족주의로 분단을 극복해야만 세계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석했다. 1980년대 초에 그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중립화 통일론’을 지지했다.

1984년 8월 30일 문익환, 계훈제, 성내운, 유인호, 김병걸, 백기완, 이창복 등은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족통일의 달성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민주·통일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민 각계에서 민주·민권운동을 앞장서서 해왔던 이들로 재야 민주·통일운동단체를 결성해야 한다며 ‘민주·통일국민회의’ 창립을 결의했다. 그해 10월 26일 열린 ‘민주·통일국민회의’ 창립대회에서 문익환은 의장에 선출되었다. 창립대회에서 낭독된 창립 선언서는 1980년대 초까지 이어온 문익환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런데 이 창립선언서에서 주목되는 구절은 민중의 몰락과 희생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통일 국민회의는 민족민주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대적 배경으로 “스스로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하려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전 민중의 주체적 노력은 가혹한 탄압과 제 악법에 압살” 당하는 상황이라고 권력의 억압과 민중의 희생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역량의 계발 조직을 설명할 때에는 “민족·민중 주체 세력을 체계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며 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중을 운동의 주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을 민주·통일 국민회의의 과업으로 인식

했다(민주·통일 국민회의 1984).

1985년 2.12총선 직후 재야 민주세력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5년 3월 29일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민주통일국민회의 두 단체의 통합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로써 민주·민주·통일운동을 총체적으로 선도하는 조직으로 민주·통일민족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이 설립되었다.

1985년 5월 10일 문익환은 민통련을 대표하여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그는 미국의 남북 교차 승인 정책에 대한 반대, 미국이 군사독재정권이 추구하는 남북대화와 통일론을 지지하는데 대한 항의 등을 표명했다(문익환 외 1985). 민통련은 1985년부터 ‘군사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해 11월에 민주헌법쟁취위원회를 결성했다(문익환 1986, 15).

문익환은 1986년 5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경찰은 5.3인천항쟁 직후인 5월 5일 서울대에서 열린 ‘5월민족민주해방제’에서의 그의 연설을 시위선동으로 문제 삼았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익환은 ‘서울대 자민투에서 발간한 『해방선언』을 보았더니 학생들은 과격하지 않고 온건하더라, 6년 전 광주에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쏟아지는 총탄 앞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맨몸으로 돌진하면서 싸웠다,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소의 배를 칼로 찌르고 농약을 먹고 죽는 농민들의 참상이 모두 민주주의가 안되기 때문이다, 한 달에 1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이 땅의 1천만 명 중 55%라니 문제가 아니냐,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과 박정희정권에 이어 현 독재정권을 뒷받침하여 우리의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으니 투쟁하자’ 등의 발언을 했다(동아일보 1986년 5월 23일).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던 문익환은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에야 석방될 수 있었고, 그는 출소일 다음날인 7월 9일 이한열 영결식에서 전태일부터 이한열까지 ‘열사’들의 이름을 외쳤다.

2. 연방제 3단계 통일론과 1989년 방북 사건

1988년 4월 16일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건설 준비위원회’는 연세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익환은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토론에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인 제안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 제안에는 통일방안에 대한 문익환의 생각이 잘 담겨있다.

우선 그는 준전시 상태를 종결하는 일로서 평화협정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고, 미군철수의 필요성과 연방제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단계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두는 남북한 UN동시가입의 유용성을 역설했다. 문익환은 3단계 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은 김대중의 연방제 통일안과 북한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안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남북의 상호 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통일방안이었다. 연방제 1단계는 군사·외교를 남과 북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유엔 외교만 단일화를 지향하는 것이었고, 2단계는 군사와 외교는 통합하고 남북한의 사회·경제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3단계는 남과 북의 두 단위로 실시하던 지방자치제를 도(道) 단위로 세분화하여 각 도의 실정에 맞는 체제와 제도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문익환의 연방제 통일방안에는 연방제 통일안과 함께 영세중립화 선언을 해야 한다는 중립화 통일론이 포함되어 있다(연세대총학생회 1988, 3-4). 그의 통일방안은 이전부터 그가 주장해온 논의들의 연장선에서 제시되었다. 남북이 서로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북한은 자유를 향해서, 남한은 평등을 향해서 과감하게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문익환은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통일 논의는 남과 북이 다 같이 체제유지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하면서 민중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 차원의 통일논의는 반통일적이라고 비판했다(문익환 1999a, 252-253).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 인적 교류 추진과 교역 개방, 중·소와의 관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 제안을 거부하는 한편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다. 8월 15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최고당국자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김일성은 ‘9.9절’ 전야행사에서 “연방공화국을 기초로 통일 문제를 모색하기 위한 남북한위원회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이 평양에 오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동아일보 1988/9/9). 노태우 대통령은 10월 18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12월에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안했다.

1989년 1월 1일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을 제의한 후 “이를 위해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총재들과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을 평양에 초청한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89/1/4). 이에 대해 2월 4일 문익환과 백기완은 김일성의 남북정치협상 회의의 참가 제안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월 25일 문익환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초청으로 평양에 도착했다. 국토통일원 대변인은 문익환의 방북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한 바 없고, 그의 방문을 허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홍구 국토통일원 장관은 “문목사의 방북이 남북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언론에서는 문익환의 방북이 북한이 적화통일전선이 효과적으로 먹혀들고 있다고 오판하고 정부 차원의 대화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다(동아일보 1989/3/27).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우리는 김일성의 억압과 통제의 정치와 비민주적 반인간적 체제에서, 존경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문목사에게 묻고 싶다”며 민족적 과업을 소영웅주의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동아일보 1989/3/27). 조선일보는 「그는 대한민국을 무시했다」라는 사설에서 “모든 통일은 선(善)”이라고 한 문익환의 발언을 인용하며 “그렇다면 김일성-김정일을 수령으로 모시게 되는 통일도 선이란 뜻인지”라며 문익환의 통일인식과 발언을 왜곡해서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었다(조선일보 1989/3/28).

1989년 4월 2일 평양에서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 문익환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 명의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는 9개 항에 걸친 양측의 합의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핵심은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라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는 것이었다(문익환·허담 1989). 이를 뒤 조선일보 등 한국의 보수 언론에서는 이 성명에 대해 “문익환씨와 북한 사람들이 벌인 쇼”, “‘김일성 전략 지지’ 또 한 번 충격” 등의 표현을 써서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우리는 연방제라는 것이 남북의 ‘혁명세력’에게는 유리하고 남의 자유주의-자본주의 지지파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 경계하는데, 문씨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지지했다”라면서 문익환의 연방제 통일 지지 사실을 ‘친북 혁명세력’이라 그런 것처럼 묘사했다. 또한 북한은 ‘연북(聯北)-연공(聯共) 합작작전’으로 남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속셈을 갖고 있으며 문익환을 이러한 장단에 놀아난 사람처럼 규정했다.

한국이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우리 정부들은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자기들의 독재를 정당화시켜왔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가장 큰 핵심은 항시 야당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빨갱이인양 때로는 국가를 파괴시키는 자인양 조작하여 사형도 시키고 또 감옥에 보내는 일이었다. (중략) 정부는 마치 문익환 목사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신문을 동원하여 소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식인과 목사들도 여기에 동조하여 마치 문익환 목사가 한국의 국가를 뒤흔들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민주를 억눌러 왔던 보안법이 또다시 문익환 목사의 발에 쇠고랑을 채웠다.

과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정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법을 초월하는 존재이고 국민은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허수아비인가?(김철수 1989)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교포 김철수는 미주판 『세계일보』 독자의 마당 코너에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처럼 다루는 한국 정부와 언론을 ‘자유민주주의’에 기대어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발표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방북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고 대북교류 및 통일정책을 독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문익환이 북한에 가서 ‘존경하는 김일성 주식’이라고 했다고 하여 마치 문익환 목사가 빨갱이인양 한국에서는 공격하는데,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에 가서 연설하면서 ‘존경하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라 했다 하여 레이건이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믿을 사람이 어디있겠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변호사 조용환도 『한겨레신문』에서 문익환 목사의 북한 방문을 ‘명백한 범법행위’로 단정해놓고 초강경 대응을 하는 정부 당국의 행위에 대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는 듯한 어두운 그늘을 느끼게 된다”고 비판했다(조용환 1989). 그는 문익환의 통일론과 정치적 신념을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유민주주의란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할 권리를 가지는 정치체제임을 환기시키면서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침과 정부의 통일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

론분열’ 등으로 매도하고 처벌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분단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써온 정부 당국자들과 지배이데올로그들이 역설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체였음을 이들은 문익환 방북 사건을 통해 드러냈다.

V. 맺음말

1980년대 중후반 학생운동·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 저항운동의 공세에 대해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지배이데올로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방어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들은 ‘공산화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한다는 방어적 자유민주주의론을 부르짖었으나, 민주주의의 실질화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1960~70년대 남북 간의 대결은 사실상 ‘국력’이라는 이름의 경제성장 경쟁이었고, 남북 간의 팽팽하던 경쟁 구도는 1970년대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계기로 남한 우위로 확실히 기울었다. 전두환 정권은 이러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했다. 전두환은 1987년 4.13 호헌 선언 때까지도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는 태도를 유지했으면서도 역설적이게도 통일 정책에는 ‘전국 총선거’에 따른 통일정부와 통일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기에 ‘자유로운 직접 선거’의 원칙이 대내적으로는 권위주의적 통치 유지를 위해 유보되었지만, 대북관계에서는 사실상의 흡수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신봉하면서 냉전의 이완·해체 국면에서 ‘공산권’에 대한 개방을 강화하는 정책을 앞세우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유보시키기도 했으며 반공주의를 매개로 저항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는 독재시대의 유산을 유지했다. 지배이데올로그들은 이러한 탄압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차원에서 정당화하면서도 기존의 반공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시장독점과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와 같은 자유주의가 초래하는 부정적 유산들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과 균등한 기회 보장의 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공동체적 윤리를 강화해야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처럼 냉전적 자유민주주의를 정정하는 기획은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세력의 성장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발전주의적 주체를 양성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신군부에 의해 사법살인을 당할 뻔했던 김대중은 1985년 2.12 총선을 코앞에 둔 2월 8일 신민당의 선거 지원을 위해 귀국했다. 총선 뒤 김영삼과 함께 민주협 공동의장을 맡은 김대중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개헌운동 국면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동지적 관계였지만, 김영삼의 노선은 김대중에 비해 더 보수적이었다.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 국면에서 김대중은 소위 ‘재야민주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형성했고, 평민당은 재야인사들의 입당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영삼은 평민당에 색깔론 공세를 퍼며 “앞으로 민주당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김대중과 평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인 것처럼 선을 긋기도 했다. 김대중은 끊임없이 용공시비에 시달렸지만, 그는 ‘비폭력 민주주의, 비용공 남북통일, 비판미 민족자주’를 내세울 만큼 자칭 ‘온건개혁주의자’였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였다. 그는 공정한 분배에 취약한 시장경제의 약점을 응시하며 산업민주주의의 기제들을 통해 시장경제의 한계를 자유주의의 틀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같은 시장경제에 대한 김대중의 자유주의적 태도는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친화적이었던 지배이데올로그들의 그것과 일정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도 했다. 1997년 대통령에 취임하여 IMF 외환위기를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까지 이어지는 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대한 김대중의 신봉은 그 뿌리가 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전·분단이 유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파행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 대안적 자유민주주의자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이질적인 두 체제의 현실을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안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던 그의 통일론은 1980년대 지배이데올로그들의 흡수통일론적 태도와 뚜렷이 구분된다. 분단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동원되면서 자유의 가치가 선택적으로 향유되고 평등의 가치가 무력화되는 상황 속에서 김대중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 한국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었다.

문익환은 1980년대 민중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중첩 내지 접점을 보여준 인물로 주목된다. 1980년대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 진영에서 떠오른 민중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의 단절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사회주의 혁명으로서의 이행을 위한 정치사상이었다. 그런데 문익환의 민중민주주의론은 사회주의 혁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었다. 문익환은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이 곧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은 1980년대 급진적 좌파운동의 흐름이 저항적 자유민주주의에 끼친 강력한 영향의 흔적을 보여준다. 문익환의 민주주의론이 갖는 특징은 ‘민족주의(통일)와 민주화(민중지배)’를 분리불가능한 일체화의 어떤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통일 민족주의를 압도적으로 강조하는 그의 태도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민족주의에 종속시킴으로써 민주화와 통일의 관계와 구체적 전망을 단순화시킨다는 약점을 낳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탈냉전적·탈식민주의적 태도는 시대의 고난을 받는 존재로서의 민중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불균등한 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중과 비교해보면 문익환이 미국과 소위 ‘자유진영’에 대해 더 비판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했다. 문익환은 1989년 방북사건을 통해 냉전·분단 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자가당착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드러냈고, 체제수호적 관점의 ‘방어적 자유민주주의론’이 탈냉전적 자유민주주의자에 대해 얼마나 폭력적인 법·담론의 통치를 수행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이상록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고, 최근의 관심 주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탈성장의 관점으로 보는 발전사 등이다. 대표논문으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상계』』, 『민주주의는 개발주의에 어떻게 잠식되어왔는가』, 『추방당한 두 성직자의 초국적 인권 연대 이야기』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정인. 2002.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울: 책세상.
- 국토통일원. 1982. 『민족화합 민주통일론 1』. 서울: 국토통일원.
- 국회사무처. “제125회 국회본회의록 제16호.” 1985년 6월 1일.
- 김대중. 1990. 『김대중 연설문집: 민족의 내일을 생각하며』. 서울: 학민사.
- 김대중. 1993a. 『후광김대중대전집 3』. 서울: 중심서원.
- 김대중. 1993b. 『후광김대중대전집 4』. 서울: 중심서원.
- 김대중. 1993c. 『후광김대중대전집 5』. 서울: 중심서원.
- 김대중. 1993d. 『후광김대중대전집 11』. 서울: 중심서원.
- 김용철. 2019.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김대중의 인식과 철학.” 『아세아연구』 제62권 제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김창순.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유공론』 222호(1985년 9월). 한국반공연맹 자유공론사.
- 김철수. “문목사 방북소동과 자유민주주의.” 『세계일보(미주판)』 1989년 4월 18일.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CDM006_09_00C0046
- 김학재. 2017. “김대중의 통일·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제9권 제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형효. 1986. “민주자본주의의 이념과 철학.” 『국책연구』 제3권 제2호(1986년 여름호).
- 노태우. 1986. “제130회 임시국회 대표연설.” 『진정한 민주화의 청사진을 밝힌다』. 서울: 민주정의당.
- 문익환. 1980. “민족을 통일하는 민주주의.” 『씨울의 소리』 1980년 3월호(전면삭제).
- 문익환. 1986. “신년사: 1986년을 민주화의 해, 민족통일의 해, 민중해방의 해로.” 『민주통일』 4호.
- 문익환. 1999a. 『늦봄 문익환 전집 3권: 통일1』. 서울: 사계절출판사.
- 문익환. 1999b. 『늦봄 문익환 전집 4권: 통일2』. 서울: 사계절출판사.
- 문익환. 1999c. 『늦봄 문익환 전집 5권: 통일3』. 서울: 사계절출판사.
- 문익환 외. 1985.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문익환 · 허담. 1989. “공동성명.” [문익환목사 방북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전
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CDM006_14_00C0013

민주 · 통일 국민회의. 1984. “창립대회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
카이브.

박석균. 1986. “좌경의식화 현상분석 및 수용방향.” 『국책연구』 제3권 제2호
(1986년 여름호).

송병헌 · 이나미 · 김면희. 2004.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성격』. 서울: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송복 · 진덕규. 1986. “대담: 자유민주주의의 최소 요건.” 『월간조선』 제7권
8호(1986년 8월호)

연세대학교총학생회. 1988.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윤원구. 1985. “민중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 『자유공론』 222호(1985년 9
월). 한국반공연맹 자유공론사.

이남희. 2015. 『민중 만들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서울: 후
마니타스.

이상록. 2020.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상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
화연구원.

이유나. 2007. “문익환의 통일론의 형성과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2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유나. 2020. “문익환의 평화 · 통일 사상 담론과 성찰.” 『신학사상』 188.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이재영. 1987.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민족지성』 12호
(1987년 2월)

전재호. 2016.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 1980~1987년.” 『기
역과 전망』 35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천구. 1985. “좌경 이데올로기의 도전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정립과제.”
『국제문제』 182호(1985년 10월).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조용환.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한겨레신문』 1989년 9월 12일.

- Ernesto Laclau & Chantal Mouffe 지음. 이승원 옮김. 2012.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서울: 후마니타스.
- Norberto Bobbio 지음. 황주홍 옮김. 199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Liberalism and democracy*)』. 서울: 문학과지성사.

Abstract

Changes in the Cold War Order in the Mid to Late 1980s and Whereabouts of Korean Liberal Democracy

Lee, Sangrok*

In the 1980s, Korea's liberal democracy was understood only as a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but in conjunction with changes in the Cold War order, liberal democracy revealed a diverse spectrum and was sometimes combined with radical ideas.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at discursive function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performed in the mid-to-late 1980s, when the tectonic shift and dissolution of the Cold War and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were turbulent, through the flow of three separate but related subjects. While the Chun Doo-hwan and Roh Tae-woo regimes and ruling ideologue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substantiation of democracy, they used liberal democracy as a means of defending the system against the offensive of radical resistance movements. Some ruling ideologues focused on creating capitalist subjects by criticizing existing anti-communist policies and attempting to correct liberal democracy in a positive direction. Kim Dae-jung was a self-described 'moderate reformist' who advocated 'non-violent democracy,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non-communist relations, and non-anti-American national independence', and was basically a liberal who advocated a market economy. He can be seen as an alternative liberal democrat in that he actively raised economic democratization to realize distributive justice and was critical

* Senior Reseacher,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rokhistory@gmail.com

of the breakdown of liberal democracy caused by the Cold War and division. Moon Ik-hwan, who argued for people's democracy, shows traces of the strong influence that the radical leftist movement of the 1980s had on resistant liberal democracy. His post-Cold War and post-colonial attitude evokes the people as suffering beings of the times, and at the same time reveals that the problem of democracy is not free from the problem of uneven relations with the powerful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liberal democracy, Chun Doo-hwan, Roh Tae-woo, Kim Dae-jung, Moon Ik-hwan

논문투고일: 2024. 05. 16.

논문심사일: 2024. 05. 17.

게재확정일: 2024. 05. 27.